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1,904천km ²	G D P	8,508억 달러 (2014년)
인구	251백만 명 (2014년)	1 인 당 GDP	3,383 달러 (2014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Rupiah (Rp)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11,865.60 (2014년 평균)

- 인도네시아는 17,5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 국가로 동서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음.
- 석유, 천연가스, 주석, 니켈, 목재, 석탄 등 광물자원과 산림 자원이 풍부하고 연평균기온이 25~27℃에 달하는 열대성기후로 다양한 열대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자원도 풍부함.
-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어 화산 분출,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음.
-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민주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2004년 실시된 최초의 직선제 대선에서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음.
- 1995년 반동회의 개최를 통해 제3세계 진영에서 비동맹·중립 진영의 결속을 주도한 바 있으며, 중도 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e
경제성장률	6.2	6.5	6.3	5.7	5.1
재정수지 / GDP	-1.3	-0.6	-1.7	-2.1	-2.5
소비자물가상승률	5.1	5.4	4.3	6.4	6.0

자료: IMF.

□ 수출 둔화, 고금리 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2014년 5.1% 성장

-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가격 상승과 각종 개혁정책 시행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로 2008년 금융위기 전후 다른 신흥국보다 경제성장률이 양호하였으나, 원자재가격 안정화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환율 변동 확대에 의한 투자심리 악화로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12년에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고정자본 투자 증가로 6.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13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투자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5.7%로 하락하였음.
- 2014년에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수출 둔화, 환율 유지를 위한 고금리 정책 지속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5.1%까지 하락하였음.

□ 연료보조금 감축으로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0% 수준

- 2009년 이후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내외 수준에서 관리되었으나, 2013년에는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 가격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음.
-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세 둔화, 식료품 가격 안정 등으로 4.3%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 전기세 인상,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으로 6.4%까지 상승하였음.
- 2014년에는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작황 부진에 따른 식료품 가격 상승, 11월에 단행된 연료보조금 추가 감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경기부양 및 선거 실시의 영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

- 협소한 세수기반, 인프라 구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2011년 이후 악화되고 있으나, 재정 관련 법규 준수로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재정수지 적자와 공공부채의 법정상한선은 각각 GDP의 3%와 60%로 규정되어 있음.
- 2012년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연료보조금 지급액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의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7%를 시현했으며, 2013년에는 경기부양 정책 시행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증가세 둔화로 동 비중이 2.1%까지 상승하였음.
- 세수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총선과 대선 실시되면서 2014년에는 동 비중이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경제성장 제약

- 세계경제포럼의 2014-2015년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2015)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부문 경쟁력을 조사대상 144개국 중 56위로 평가함.
- 도로(72위), 항만(77위), 공항(64위), 전력공급(84위) 등 주요 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군도국이라는 지리적 특성, 송전 인프라 투자 부족 등으로 지역별 전력 보급률 차이가 크며, 교통인프라의 연결성 부족 및 취약성으로 물류비가 GDP의 24%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열악한 인프라 수준이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GDP 대비 인프라투자 비중은 3~4%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과거 1997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부정부패 만연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 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고 정경유착도 심각함. 세계은행은 부패가 외국인투자의 걸림돌이라고 평가하였음.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평가대상 175개국 중 아르헨티나, 지부티와 함께 107위를 차지하여, 필리핀이나 태국(85위), 중국(100위)보다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KPK)를 설립하고 기소권과 자체 구치소 보유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부패방지에 힘을 쏟고 있으나 공무원, 정치인 등 고위층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쌍둥이적자 누적 등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에 상대적으로 취약

- 선진국의 통화 확대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약 1,863억 달러* 수준(2012년 GDP의 21%)의 유동성이 유입된 가운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를 보이면서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짐.
- * 주식투자 760억 달러, 채권투자 461억 달러, 은행차입 642억 달러로 구성
- 2013년 중반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 우려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유동성위기 발생 우려가 높아진 바 있으며 2014년 12월에도 유가 급락에 따른 신흥국 투자심리 위축으로 환율 급등을 경험하였음.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외국인자금 이탈과 과도한 환율 상승 방지를 위해 당초 5.75%였던 기준금리를 2013년 중 다섯 차례에 걸쳐 7.5%까지 인상하였으며, 2014년에는 구두개입을 통해 환율 안정세를 유지하였음.

나. 성장 잠재력

□ 탄탄한 내수기반 보유

- 인도네시아 내수시장은 약 2.5억 명의 인구와 소득 증가에 힘입어 급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데, 2014년 민간소비는 GDP의 56.3%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됨.
- McKinsey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30년 인도네시아는 9천만 명의 소비자가 1조 달러 규모의 소비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풍부한 천연자원과 저임노동력

- 동남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이며 주요 광물자원 보유량 역시 세계 10위권 내로 분석되는 등 보유자원이 풍부하나, 각종 규제와 자원민족주의적 정책 추진으로 보유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석유와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각각 약 37억 배럴(세계 27위)과 2.9조 입방미터(세계 14위)임. 또한, 주석 80만 메트릭톤(세계 2위), 니켈 390만 메트릭톤(세계 6위), 동 2.8만 메트릭톤(세계 8위)의 매장량을 보유함.
- 투자 부족에 따른 설비 노후화로 석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04년부터 석유순수입국이 되었으며, 2014년 1월 광업법 개정으로 광물 수출세 부과, 제련소 건설 의무화, 광산 지분양도 규제 강화 등 자원 민족주의적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20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65.2%를 기록하여 저임노동력이 풍부함.
- U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동 비중은 2010년 65.2%에서 2025년 68.8%까지 상승한 후 2050년까지 65.3%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기업들이 고급·전문인력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다. 정책성과

□ 연료보조금 제도 전면 개편을 통한 재정 및 경상수지 건전성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연료가격을 고정시켰으나 2013년 6월에 이어 2014년 11월 연료보조금을 감축하여 연료가격을 인상한 이후, 2015년 1월부터는 시장가격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휘발유에 대한 보조금은 폐지하고 경유는 경우에도 정액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함.
- 연료보조금 지급은 자동차 판매 증가, 연료 과다사용에 따른 석유제품 수입 증가 및 보조금 지급액 급증을 유발하여 상품수지와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주었음.
- 유가하락을 활용한 동 개혁조치 시행으로 경상수지 개선과 효율적인 재정 활용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등이 기대됨.
- 2015년 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료보조금 예산을 276조 루피아에서 81조 루피아로 삭감하고 인프라 투자 예산은 130조 루피아에서 290조 루피아로 증액한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음.

□ 투자환경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 신투자법을 제정하여 내외국인 동등대우, 자유로운 과실송금 허용,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명시하였고, 2012년 2월 신투자계획안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신투자계획안에는 투자절차 간소화, 인프라와 에너지 부문 강화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 투자제한산업 축소,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 투자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은 2015년 1월 중앙정부 차원의 단일창구 통합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각 지방정부에도 유사한 통합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 상 수 지	5,144	1,685	-24,418	-29,130	-23,606
경 상 수 지 / GDP	0.7	0.2	-2.8	-3.4	-2.8
상 품 수 지	31,003	33,825	8,679	5,833	10,960
수 출	149,966	191,109	187,346	182,089	178,970
수 입	118,963	157,284	178,667	176,256	168,010
외 환 보 유 액	89,970	103,611	105,907	93,427	106,073
총 외 채 잔 액	202,445	225,418	252,408	265,952	293,539
총외채잔액/GDP	28.6	26.7	28.8	30.6	34.5
D. S. R.	10.8	11.0	9.6	11.2	11.1

자료: IMF, EIU 및 IIF.

□ 루피아 가치 약세에 힘입어 110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 시현 추정

- 상품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석탄, 천연가스, 팜오일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 하락에 따른 교역 조건 악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12년 87억 달러로 급감하고 2013년에도 58억 달러까지 축소되었음.

- 2014년에는 원자재 수출 부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루피아 환율이 전년 대비 상승함에 따라 제조업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110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상품수지 개선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다소 개선

- 상품수지 흑자 축소, 취약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과실송금액 증가, 외채잔액 증가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1997년 이후 처음으로 2012년에 적자로 전환하였음.
- 2013년에는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더욱 확대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3.4%까지 상승하였음.
- 2014년에는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과실송금액 증가, 외채 증가로 인한 원리금상환 규모 증가로 소득수지가 악화되었으나 상품수지 개선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2.8%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2014년 외환보유액은 1,061억 달러로 증가 추정

-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2011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2년에는 경상수지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힘입어 1,059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 2013년에는 외국인 자본 이탈과 경상수지 적자 시현, 환율 방어에 대한 투자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934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이 1,061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외채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D.S.R.은 11% 수준을 유지

-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감소 추세를 이어갔으나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34.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다만,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잔액 규모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12년 9.6%를 기록했으나, 외채 증가와 수출 감소로 2013년과 2014년에는 11%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개혁 성향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 2014년 7월 대선에서 투쟁민주당의 조코 위도도(Joko Widodo) 후보는 친서민적이고 청렴한 후보라는 인식에 힘입어 53%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함.
- 군부 출신인 상대 후보(프라보워 수비안토)의 선거결과 불복 제소를 헌재가 이를 기각하였으며, 대선 이후 10월 대통령 취임까지 별다른 소요사태도 발생하지 않아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함.
- 개혁 성향으로 국수주의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한 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구조 개혁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보복성 테러 발생, 테러리스트 석방 압박 등 불안 요소 잠재

- 2002년 제마이슬라미야(JI) 주도의 발리 폭탄테러 이후 인도네시아는 경찰 대테러부대를 활용하여 JI 조직원을 체포·사살하는 강경책을 구사하였는데, 2012년말까지 820명의 테러리스트를 체포하고 80명을 사살하여 동 조직의 무력화에 성공함.
- 그러나 탈종교적 성격의 보복성 테러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2년 미국, 호주의 외교시설에 대한 테러 시도가 적발되는 등 테러 위협이 남아 있음.
- 특히, 출소를 앞둔 테러리스트들이 향후 이슬람국가(IS) 등 무장 세력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테러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자카르타, 발리 등 일부 대도시 지역에 투자가 편중되어 경제발전의 지역간 불균형이 존재하며 계층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최근 급격한 소득격차 확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5에서 2010년 0.38, 2013년 0.41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다자 외교에 적극 참여

- 중도 노선 및 다자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외교 노선을 유지하면서, UN, ASEAN, NAM(비동맹운동), OIC(이슬람회의기구), G20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한 역할 증대에 적극적임.
- ASEAN 창설을 주도하는 등 역내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2006~08년에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였음.

□ 중국과의 관계는 긴밀하나 역내 영향력 확대는 견제

-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양국간 교역규모 확대, 통화스와프 협정 연장 등에 합의하는 등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인도네시아는 중국-ASEAN FTA 발효 이후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는 등 중국의 지나친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역내 균형 유지를 위한 미국과 관계 개선

-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인 비동맹 중립외교 기조 하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역내 관여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2010년 11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국민 방문시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군사협력은 2004년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정상화되어 2005년 미국의 대 인도네시아 무기금수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2010년에는 인도네시아 특수부대(Kopassus)와의 합동훈련을 재개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에 힘입어 외채 차환에 성공

- 인도네시아는 과거 채무재조정 및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조기상환하였음.
- 동국은 2002년 67억 달러, 2005년 26억 달러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받은 바 있으며, 1998년~2003년 중 IMF의 지원을 받았으나 경제여건 개선과 외환보유액 증가로 동 차관을 2006년에 조기 상환하였음.
- 인도네시아는 양호한 채무상환 태도와 신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한 기대감 등에 힘입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규모 외채 발행에 성공하고 있음.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보유

- 중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구조가 양호하며, 양허성차관 비중은 2008년 27.4%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3년에는 13.5%를 기록함.
- 또한, 2010년 이후 신규 도입한 외채의 평균만기는 15년, 평균금리는 4%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관리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양호한 경제성장 등으로 주요 신용평가기관 등급이 상향 추세

- 2011~2013년중 OECD와 3개 국제신용평가사(S&P, Moody's, Fitch)는 세계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증가 등 대외 유동성도 개선되고 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신용등급을 모두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2013년 이후 등급 변경은 없으며, S&P는 보조금 제도 개선 등 개혁조치 시행 필요성, 대외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2013년 5월 등급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로 조정함.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행	C1 (2015. 2.)	C1 (2014. 2.)
OECD	3등급 (2013. 6.)	3등급 (2012. 3.)
S&P	BB+ (2013. 5.)	BB+ (2011. 4.)
Moody's	Baa3 (2012. 1.)	Ba1 (2011. 1.)
Fitch	BBB- (2011.12.)	BB+ (2011. 2.)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9월 18일 (북한과는 1964년 4월 16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71년), 임업협정(1987년), 이중과세방지협정(1989년), 항공협정(1989년, 2000년 개정), 투자보장협정(1994년), 문화협정(2007년), 범죄인인도조약(2007년), 원자력협정(2011년), 형사사법공조조약(2014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3,955	11,568	11,361	석유제품, 철강관, 편직물
수 입	15,676	13,190	12,266	천연가스, 석탄, 원유
합 계	29,631	24,758	23,627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4년말 기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9위 수출국, 제12위 수입국이나, 주요 수출·수입품목의 교역액 감소에 따라 교역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제9위 해외직접투자국으로 동국 앞 해외투자 실적은 1,840건, 82억 9,164만 달러(2014년말 누계 기준)를 기록함.

V. 종합 의견

-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로 2013년 경제성장률은 5.7%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 둔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감소로 경제성장률이 5.1%에 그쳤음.
- 연료보조금 감축에 따른 연료가격 상승, 식료품 가격 상승과 전기세 인상 등으로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4%까지 상승하였으며, 2014년에는 성장을 둔화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연료보조금 제도 개혁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6.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경기부양 정책 시행과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증가세 둔화로 2.1%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총선과 대선 실시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동 비중이 2.5%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최근 일련의 연료보조금 개혁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향후 재정건전성 개선이 기대됨.
- 외국인투자 확대에 따른 과실송금액 증가, 외채잔액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 규모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013년 3.4%에서 2014년에는 2.8%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 대선에서 친서민적, 개혁적 성향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대선 이후 별다른 혼란 없이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하였음.
- 인도네시아의 총외채규모는 GDP 대비 34.5% 수준으로 추정되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 IMF 차관을 2006년 조기상환하는 등 채무상환태도도 무난하여 단기적 지급불능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